

시진핑 시대 민족국가 통합과 소수민족의 서발턴화*

장윤미**

요약

이 논문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 중심의 민족관과 역사관 및 국가 정체성 주입을 위한 교육 및 국가 공용언어·문자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주도의 통합 방침에 따라 변화된 민족교육정책의 상황과 쟁점을 신장(新疆), 연변(延邊), 홍콩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이 중국공산당의 「당장」과 국가 「헌법」에 포함된 이후, 이는 중국공산당이 지난 백 년 동안 변함없이 꿈꿔왔던 목표로 재구성되었고, 전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민족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주조와 '중화자녀(中華兒女)' 세대를 잇는 계승, 그리고 '중화민족의 정확한 역사관'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중화민족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획일적인 언어 및 사상교육이 강화되면서, 민족어 교육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소수민족들은 점차 서발턴적 속성(subalternity)을 띠게 되었다. 즉 지배권력에 의해 기획·수행되는 중화민족이라는 '정치 주체화'의 과정에 포획되면서, 점차 말할 기회를 잃고 침묵당하며 서발턴화되고(subalternized)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2S1A5C2A02091373)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dochibin@naver.com

주제어: 중화민족, 소수민족의 서발턴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문화융강(文化潤疆), 신장 위구르족, 홍콩 통식교육, 조선족

I. 서론

중국공산당은 19차 당 대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당장」과 국가 「헌법」에 기재했다.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는 건국 이후 국가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이전의 공식 용법은 ‘중국민족’이거나,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는 ‘중국인민’이었다. 오랫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중화민족’이란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체성을 기존의 ‘혁명당’에서 ‘집정당’으로 재설정된 것과 관련된다. 1997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총서기가 하버드대 강연에서 처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를 제기했고, 잇달아 ‘삼개대표(三個代表) 중요사상’을 내놓았다. 당의 성격을 기존의 ‘노동자계급’의 전위대에서 전체 ‘인민’과 ‘민족’의 전위대로까지 확장했고, 이로써 중국공산당이 자산계급을 포함한 대다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논리를 통해 당의 집정지위를 합리화했다. 즉 ‘중화민족’의 공식적인 제기는 ‘민족 정당’으로 당의 성격 변화, ‘집정당’으로의 당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된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저성장 시대 당의 집정지위의 정당화를 위한 중요한 구호로 강조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중국의 꿈(중국몽)’이라는 국가목표와 연결하였고, 중국의 꿈을 중심으로 당-국가-인민-민족을 하나로 묶어 일체화하려 한다(習近平 2012). 이러한 민족부흥의 꿈은 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쑨원(孫文)이 외쳤던 ‘진흥중화(振興中華)’의 꿈과 연결되며(周学斌 2016), 중국공산당이 지난 백 년 동안 변함없이 꿈꿔왔던 목표로 재구성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전체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대를 잇는 계승과 ‘중화자녀(中華兒女)’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창당 100주년에 이어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구조’와 ‘중화민족의 정확한 역사관’ 등의 사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화민족’이라는 국민 만들기 과정은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 지우기의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漢族) 이외의 민족은 약 8.89%를 차지하며,¹⁾ 이들을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식별’된 55개 소수민족이 지금의 주류 민족인 한족과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왔는지는 모두 다르므로, 개별 소수민족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대체로 신장(新疆) 위구르족, 티베트 장족(藏族), 몽골족, 회족(回族), 조선족 정도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뚜렷한 에스닉(ethnic)의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 소수민족은 장기간의 역사 과정에서 동화되었다. 따라서 중화민족이라는 ‘국민’으로 주체화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소수민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로 변경 지역에 위치하여 자신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지켜왔던 소수민족은 네이션(nation)과 에스닉의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국가목표 설정에 따른 전략적 차원에서 ‘중화

1) 2020년 시행한 제7차 전국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인구 중 한족 인구는 12억 8,631만여 명으로 91.11%, 소수민족 인구는 1억 2,546만여 명으로 8.89%를 차지하였다.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센서스와 비교하여 한족 인구는 4.93% 증가했고, 소수민족 인구는 10.26% 증가했다.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중국 통계국 사이트.

민족'을 강조할수록, 일부 소수민족은 국민화된(nationalized) 틀의 기준에 따라 '추방'되면서도 '포획'되는 이중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²⁾ 국가통합을 위해 중화민족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통일된 언어 및 사상교육이 진행되면서, 민족어 교육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소수민족들은 국가 우선주의라는 주류적 흐름 속에 종속되고 배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소수민족은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 점차 서발턴화되고(subalternized)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배권력에 의해 재편되는 질서와 공동체 규범의 획일화 과정에서 특정 소수민족의 문화와 담론이 종속되고 소수민족이 주변화되는 과정을 '서발턴화(하위주체화)'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배계급으로부터 배제된 하위주체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은 '서발터니티(subalternity, 서발턴성)'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발턴(subaltern)'은 원래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가 사회의 하층계급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던 개념으로, 1980년대 인도 사학계에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역사학에 깃들어있는 엘리트주의 담론을 비판하기 위해 이 개념을 가져왔다.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를 비롯한 서발턴 연구그룹(Subaltern Studies Group)은 포스트식민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서발턴의 역사를 재구축해왔다. 이후 서발턴 이론과 개념이 아시아나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서발턴 개념은 해당 사회의 '장소성'에 따라 그 개념적 의미가 다르게 맥락화되어왔다.

서발턴 혹은 하위주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상당히 모호하며, 해

2) 아감벤(2008)은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 권력의 속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주권은 규칙의 바깥인 '예외 상태'를 창출하는데, 예외화는 일종의 '추방령(ban)'을 내리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는 예외 상태 속에 버려진 존재로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만, 공동체의 법과 무관하게 그 바깥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형태로 그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으면서 포함된 존재이다. 즉 정치적 역량이 완전히 박탈된 형태로만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역설적인 존재를 말한다.

당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서발턴/서발터니티란 개념을 통해 중국 소수민족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주의 기획과 더불어 나타난 소수자의 종속된 상태와 드러나지 않는 서발턴의 존재를 가시화해보기 위해서이다. 기존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관점(서상민 2001; 정보은 2021)이나 분리독립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관점(이동률 2004; 이재호 2008)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수민족에게 특혜를 부여하거나 혹은 민족 관련 담론을 발화하는 주체는 당·국가뿐이다. 반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명제로 대표되는 서발턴적 관점에서 보면(모리스 외 2013), 소수민족은 수혜를 입거나 혹은 탄압을 받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말할 수 없는 (비)주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배/종속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해 독점된 서사에 포획되고 억압된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의 서발턴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중화민족 정체성의 확립은 국가 공용문자·언어 통일과 역사관 주입, 사상교육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 조치로 인해 특정 소수민족의 문화는 국가의 보호 틀 안에서 ‘박제화’되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문화 전유와 해석의 주도성이 박탈되고 일상에서의 민족어 사용이 제한되는 ‘서발턴화’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19년의 반송환법 시위를 계기로, 에스닉 정체성은 아니지만 중국 본토와는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낸 홍콩의 사례도 꼽을 수 있다. 「홍콩국가안전법」이라는 법적 수단으로 중국 본토와 동일한 규범과 정체성을 강요함으로써, 홍콩이 갖고 있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은 급속히 주변화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 지역 외에도 한반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연변(延邊) 조선족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중국 당정의 공식 문건과 2차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소수민족이 서발턴화되는 현장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주의적 기획 속에서 변화된 중국의 민족관과 소수민족 현황을 통해, 중국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신시대’ 소수민족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략의 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을 2017년 중국공산당 「당장」과 2018년 국가 「헌법」에 기입함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국민(민족)과 소수민족에 관한 정책 관점과 접근 방식은 기존과 달라졌다. 첫째, ‘중화민족’이라는 네이션 중심의 중화인민공화국사를 다시 서술하고 있다.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된 2012년 18차 당대회 전후에만 해도, 마오쩌둥 정신으로 덩샤오핑의 시대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덩샤오핑의 노선으로 마오쩌둥 시대를 부정하는 좌·우파 간의 대립이 극심했지만,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 이후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계승한다는 발전의 연속사를 재정립해 왔다. 이른바 ‘중화민족의 정확한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화민족’ 중심의 중화문명사도 재정립하고 있다. 중화문명은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중심이었지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후 민족부흥의 길을 부단히 탐색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오천 년을 관통하는 중화문명사뿐 아니라 세계 인류문명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

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전제로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내세웠고, 이러한 역사적 과업은 중화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백 년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바로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국가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중화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은 19차 당 대회 이후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과 문명관, 그리고 통일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롭게 쓴 중화민족 중심관은 소수민족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전략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국가안보 시각에서의 접근

개혁개방 시기 중국공산당의 국가전략과 발전경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89년 천안문 사건과 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이다. 중국공산당에게 천안문 사건은 사회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권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다.³⁾ 그리고 20여 년 뒤인 2008년과 2009년에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뒤이어 2014년과 2019년에는 홍콩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발생했다. 소수민족 지역을 포함한 변경 지역 민중들의 시위는 당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 지역 문제의 해법을 근

3) 2019년 당 매체 『구시(求是)』는 시진핑이 2013년 1월 5일 정치국 회의에서 했던 연설을 연속해서 발표하며, 소련 망당의 교훈을 엄중히 경고했다. “소련이 왜 망했는가? 소련이 망한 중요한 원인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격렬하여 소련의 역사,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레닌과 스탈린을 부정하고 역사의 허무주의를 조장했기 때문이며 사상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习近平 2019).

본적으로 바꾸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2010년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진행되면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지역의 문제는 빠르게 국제 이슈화되어왔고,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일관된 내정(內政) 논리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해왔다. 원래 신장과 티베트는 소수민족의 문제이고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제 두 지역 모두 중국의 국가 통합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신장과 홍콩 지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신장에서는 위구르족의 ‘재교육시설’ 수용을 통해 사상교육, 취업촉진, 산아제한 강제 등이 추진됐다(BBC News 2021/02/02; 대런 바일러 2022; Amnesty International 2021/06/10). 홍콩에서는 송환법 조례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끝에 「홍콩국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민주파 의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한겨레 2021/03/01).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장과 홍콩 이슈는 중국 국내 여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한족과 내지인들 사이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통일의 꿈을 위한 조치로 지지를 받았다. 국가안보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신장의 ‘테러리스트’와 홍콩의 ‘폭도’에 대한 강경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족 중심의 세계관과 논리에서 볼 때 신장과 홍콩은 국가분열이나 사회 불안정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이슈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2. 경제민생 전략으로 접근

개혁개방 이전 ‘재분배경제’ 체제에서는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거의 없었고, 민족구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 메커니즘이 확산하고 노동력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이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전에는 민족구역에

서 자신의 민족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장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주류 언어인 ‘한어(보통어)’를 잘 사용해야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족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나 민족어 사용 등 여러 분야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해왔고, 이로써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철도나 도로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이동이 더욱 쉬워지고 전국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변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수민족은 자신의 민족구역에서조차 경제적으로 한족에게 밀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소수민족 농촌과 변경 지역의 빈곤 문제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수민족의 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시행해왔다. 인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야 국가 정체성과 귀속감도 강화되기 때문에, 변경 지역을 튼튼하게 지키는 동시에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실시해 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그리고 지정학의 변화와 자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변경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⁴⁾ ‘빈곤탈피(扶貧脫貧)’ 운동은 소수민족 지역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접경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⁵⁾ 시진핑의

4) 2017년 5월 변경에 사는 인민을 돕기 위해 국무원이 발표한 「홍변부민행동·13·5·규획」에서는 “주거안정과 변경수호 조건을 전면 개선”하여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인민들이 변경을 철옹성처럼 굳건하게 지킬 것”을 제안했다(國務院辦公廳 2017).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열린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변경강화, 변경부흥, 부민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각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人民日報 2021/08/29).

5) 빈곤탈피방안은 특히 빈곤한 세 개 지역과 세 개 주를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개 지역은 ①티베트자치구, ②칭하이(青海), 쓰촨(四川), 간수(甘肅), 윈난(雲南) 4개 성의 티베트지역, ③신장 남부의 호텐, 아커스, 카슈가르, 키질수키르키즈 자치구를 말한다. 세 개의 주는 쓰촨 량산주(涼山州), 윈난의 누장주(怒江州), 간수

최고 지적 중의 하나로 꼽히는 빈곤탈피 운동을 선전하는 주선율(主旋律) 영화도 제작 보급했는데, 대표적으로 「대산(大山)의 딸」이라는 드라마는 석사를 마친 고학력 인력이 촌으로 들어가 빈곤타파에 앞장서다 사고로 사망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⁶⁾ 특히 소수민족 농촌지역 빈곤탈피운동에서의 자아희생 정신을 강조하며 탈빈곤 정책을 홍보한다.

3. 당 영도 중심의 교육과 민족사업체계 구축

중국공산당은 2018년 「당·국가기구 개혁」을 통해 기존과는 다르게 통치구조를 재편했다. 새로운 통치구조는 모든 영역에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과 규범을 통한 국가통치의 제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사업을 영도하는 당 조직인 ‘중앙교육공작영도소조’가 신설되었다. 이 영도소조는 사상정치와 이데올로기 사업을 연구·배치하고, 국가교육발전전략의 중장기 계획 및 중대한 교육정책을 조율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新华社 2018/03/21). 또한, 기존에 국무원 산하에서 민족사업과 민족교육을 담당해오던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당 조직인 ‘중앙통일전선부’ 영도 아래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모든 민족사업과 교육사업의 정책결정권을 당 중앙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이는 당 중앙의 정책 방향과 원칙에 따라 교육 및 민족사업이 제정·집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부여했던 자치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당정군(黨政軍) 세 개 영역의 최고 수장으로 이른바 ‘삼위일체(三位

의 린샤주(临夏州)를 가리킨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18/01/24).

6) 2022년 CCTV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광시장족(廣西壯族)자치구의 바이니(百坭) 촌의 촌서기로 일하다 2019년 공무로 순직한 황원슈(黃文秀)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녀는 석사까지 마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의 취업기회를 포기하고 자원해서 빈곤촌으로 들어가 일하며 현지 88개 빈곤가정의 자립을 도왔고, “시대의 모범(時代楷模)”으로 추앙된다.

一體)’를 실현하며 집권 3기에 들어간 시진핑은 당 조직 내부에서 인사 결정과 중요회의 의제설정권도 장악했다. 2020년 9월 공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조례」에 따르면 중앙정치국과 상무위 회의, 그리고 당 중앙의 정책결정의사협조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 의제는 총서기가 ‘확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人民日报 2020/10/13). 이는 시진핑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의제로 설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할 수 있는 절차적 합법성을 획득한 것이라 하겠다. 시진핑은 취임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구호를 제기했고, 이후 수없이 많은 공식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관을 피력해왔다. 민족사업과 민족교육은 당의 정책 지침에 따라야 하고, 당은 시진핑이 설정한 의제에 따라야 하는 제도적, 규범적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 따라 시진핑의 민족관은 민족정책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네이션 민족주의 논리가 개별 에스닉 민족의 목소리를 더욱 더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Ⅲ.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주조를 위한 정책과 내용

신시대 선언 이후 소수민족을 바라보는 달라진 관점의 반대편에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이 단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의 정체성 수립, 즉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주조에는 민족단결과 국족(네이션)구성, 공동체 건설의 세 가지 담론 내용을 포괄한다(郝亚明 2022).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가 공용언어·문자를 교육해야 하고, 이러한 어문 교육은 통일된 역사관 주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사상교육 및 선전사업과 하나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당 중심의 사상-교육-문화-선전 일체 구조를 형성해왔다.

1. ‘민족단결진보교육’ 강화

개혁 이후 전국적인 이동이 잦아지고, 각 민족 간의 접촉이 늘어나 갈등이 커지면서 소수민족정책은 민족 간의 ‘단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2천 년대 들어 초·중·고교에서는 ‘민족단결’에 맞춘 교육이 중시되었고, 관련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08년 라싸 3·14사건과 2009년 신장 7·5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학교에서의 민족단결 교육을 강화한다는 골자로 이를 지도하는 최초의 문건인 「학교민족단결교육지도강요」를 발표한다(教育部 2008/12/16). 이 「강요」에 따르면, 민족단결교육의 목표는 각 민족 학생들의 사상인식과 행위를 당과 국가의 요구에 자각적으로 통일시키고, 중화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56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의 상호교류, 계승, 발양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민족단결교육내용의 기준도 마련했는데, 초등학교 중간 학년(3,4학년)에서는 민족지식 계몽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은 민족상식교육, 중학교에서는 민족정책 상식교육, 고등단계에서는 민족이론 상식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刘昌升 2015).

18차 당 대회 이후에는 ‘민족단결’에서 ‘민족단결진보’ 교육으로 진화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 및 대회도 잇달아 개최되는데, 중앙민족공작회의(2014년, 2021년),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2014년 제6차, 2019년 제7차), 중앙티베트공작좌담회(2015년 제6차, 2020년 제7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2014년 제2차, 2020년 제3차)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학교에서 더욱 ‘심화’된 민족단결진보교육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교육내용을 부여했다. 19차 당 대회에서는 “민족단결진

보교육을 심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한다”라는 목표를 당 문건에 제시했다.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주조를 뼈대(主線)로 하여 중국특색적 민족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간다”고 밝혔다(人民日報 2022/10/26).

2021년에는 교육부, 중선부, 중앙통전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신시대 학교민족단결진보교육 지도심화 강요」를 발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주조를 골자로 한 심화 교육을 강조하였다(教育部 2021/04/20). 기존 2008년 「강요」와 비교해볼 때, 2021년 「강요」의 교육목표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문구들이 추가되는데,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수립하고,⁷⁾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강시킨다”라고 하면서, “국가의식, 공민의식, 법치의식을 높이고, 가국정서(家國情懷, 가정과 국가를 하나로 생각하는 감정)를 함양하며, 국가분열과 민족단결을 해치는 언행에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① 각 과목에 민족단결진보내용을 융합시키고 ② 민족단결진보교육을 위한 특별과목을 개설하며 ③ 국가 공용언어·문자교육을 전면 강화하고, 「도덕과 법치(사상정치)」, 「어문」, 「역사」 세 과목의 교재는 국가가 통합 편찬하며, ④ 다양한 소수민족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스포츠활동과 사회실천 등 주제교육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⑤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구현하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와 민족단결진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캠퍼스 문화건

7) 올바른 종교관이란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간부들에게 대중사업 능력과 사회관리능력을 향상할 것을 강조해왔다. 중국에서도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법률과 국가이익 및 공공이익,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교신앙 자유란 신앙상의 자유화가 아니라, 국가가 허용하는 종교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또한 인민 대중에게 무신론의 선전교육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高玉峰 2011).

설을 강화하며, ⑥ 민족 간의 상호 왕래, 교류, 융합(交往交流交融)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요컨대 신시대의 교육내용과 교육목표를 다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안정적인 발전 추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내용은 ‘5개의 정체성(당, 국가, 민족, 문화, 사회주의)’을 강화하고 중화민족발전사를 학습하며, 우수한 중화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적극 육성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교육목표는 민족 간 교류와 긴밀한 민족관계뿐만 아니라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확실히 이해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주조를 확고히 조성하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재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민족단결진보교육을 위한 통합 교재인 「중화민족 대단결」(중학판)이 2022년 봄 학기에 도입되었으며, 「중화민족 대가정」(초등판)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교민족단결진보교육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하고, ‘다원일체의 중화민족’과 ‘통일된 다민족국가’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설명하면서, 신시대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끊임없이 확대·심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严庆 2022).

2. 당 사상으로 영도하는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

신장과 티베트 사건, 그리고 홍콩의 시위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신적 측면, 정체성의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18차 당 대회 이후 추진된 이른바 ‘민족단결진보교육사업’에서 민족단결의 사상체계와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은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올바른 역사관 수립과 애국주의 주입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애국주의교육실

시 강요」에서는 “애국주의 정신이 학교 교육 전 과정에 관철되도록 하고, 애국주의 교육이 수업, 교재, 두뇌 속으로 들어가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하였다(新华社 2019/11/12).

이를 위해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는데, 2021년 「중양민족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여, 중화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人民日报 2021/11/30). 여기서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이란 무엇일까? 첫째, ‘중화민족 다원일체’는 중국의 뚜렷한 특징으로,⁸⁾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국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각 민족이 함께 써오고 만들어온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9년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에서 “네 가지 함께(四個共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각 민족이 광활한 영토,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위대한 정신, 이 네 가지를 함께 만들어왔다는 것을 말한다(新华社 2019/09/27). 셋째,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것이 각 민족 인민의 최고 이익임을 알게 하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하게 수립하고 잘못된 중화민족역사관을 스스로 억제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 역사관이란 서구 사학계에서 제기하고 논의해온 ‘내륙 아시아론(內亞史觀)’, ‘신청사관(新淸史觀)’, ‘정복왕조론(征服王朝論)’ 등을 말하는데(杜建录 2022), 이러한 다양한 역사학의 논의를 ‘잘못된’ 역사관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중심의 역사관 수립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중화민족 중심의 ‘일원화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중국사회에서 정치와 일정한 거

8) 중국의 공식적인 민족관은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주장한 “중화민족 다원일체구조(中华民族多元一体格局)”론을 채택한다. 페이샤오통(1999)은 “중화민족은 자각적인 민족 실체로서는 백여 년 동안의 서구 열강과의 대결 속에서 나타났지만, 즉자적 존재로서의 민족 실체는 수천 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중화민족은 다원일체의 민족-국가정체성, 다원일체의 역사문화구조, 다원일체의 정치제도를 갖는다”라고 본다.

리를 유지해왔던 학문의 독자적 공간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의 강조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며,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역사: 중외역사강요(歷史: 中外歷史綱要)」 과목의 경우 자국사 서술을 하면서, 특히 전근대의 전 과정을 계급투쟁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국적 통합’만을 강조함으로써,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주변과의 관계를 세세하게 정의하였다(오병수 2020). 또한, 2022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을 맡은 판웨이(潘岳)는 「중화민족공동체 사강(中華民族共同體史綱)」과 「중화민족 교용사(中華民族交融史)」의 편저를 추진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 역사 교육을 “교실에 들어가고, 교재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개선하여 점차 ‘민족우대정책’에서 ‘지역우대정책’으로, ‘민족신분정책’에서 ‘공민신분정책’으로,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특혜를 해당 지역의 모든 공민에게로 바꿔야 하며, 민족교류와 관련하여 장애가 되는 법률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星島日報 2022/07/12). 이러한 주장은 일부 중국학자들이 주창해왔던 ‘제2세대 민족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⁹⁾ 이들은 표준어를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특권을 없애며,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구분을 희석함으로써 단일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역사관은 중화민족과 각 민족 간의 분명한 위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시진핑은 “大한족주의와 지역민족주의는 모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에 불리하다”고 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과 각 민족

9) 2011년 후안강과 후렌허는 기존의 민족정책 대신 '제2세대 민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56개 민족을 식별하는 제1세대 민족정책에서, 각 민족의 융합일체(交融一體)를 추진하는 제2세대 민족정책으로 전환하여, 결속력이 강하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중화민족의 변영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胡鞍钢, 胡联合 2011).

의식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민족이 항상 중화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본 민족의식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에 복종하고 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화문화와 각 민족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모두 중화문화의 구성 요소이며, 중화문화는 주요 줄기(主幹)이고, 각 민족문화는 가지와 잎(枝葉)이며,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人民日報 2021/08/29). 근본적이고 커다란 범주에 중화민족과 중화문화를 두고, 이것보다 작고 아래에 있는 범주에 각 민족의 문화를 둬으로써, 언제나 전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위계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족관은 ‘대한족주의’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중화문화의 근간이 한족의 문화임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3. 새로운 표준어와 교과서 정책 원칙

중화민족이라는 ‘국족(國族)’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류 민족인 한족과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가장 큰 민족은 티벳 장족, 신장 위구르족, 몽골족이다. 이들은 자체 언어와 문화, 종교, 사회적 관습을 갖고 있어서, 중앙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주입할 방법은 교육과 경제발전을 향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국공산당은 ‘법에 의한 국가통치(依法治國)’를 강조하면서, 민족교육 및 민족사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법률 제정과 집행을 강화해왔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언어문자교육은 법치화,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 강화라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가법률’과 민족어와 민족교육을 규정한 ‘지방법규’ 간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한어(보통어)’와 ‘규범 한자’를 국가 공용언어·문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은 이미 2001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족구역과 특히 민족구역 농촌 지역에서의 표준어 보급은 쉽지 않았다. 18대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에 걸맞은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어 보급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3·5발전규획」에서는 2020년이라는 보다 분명한 시한을 두고 전국적으로 표준어 보급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6/08/23).

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교재 편찬사업을 중시하여 2017년 7월 국가교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당 기구인 중앙교육공작영도소조는 국가교재사업을 총괄하며 통일된 영도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교육부는 전문가를 조직해 의무교육인 「도덕과 법치」, 「어문」, 「역사」 3과목의 교재를 편찬했고, 국가교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가을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张军 2021).

이러한 당 정책 기조에 맞춰 2021년 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에서는 민족학교에서의 민족어 수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입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각 민족구역자치구의 지방법에서는 민족학교에서 민족언어문자로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 제19조 5항 표준어 보급과 관련된 규정과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나 「교육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澎湃新闻新闻 2021/01/20). 이는 법리적 판단을 통해 표준어 교육이 민족어 교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동시에 「헌법」에서는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과서의 체계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한다. 통합 편찬된 중학교의 「도덕과 법치」 교과서에는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 내용이 전체 내용의 약 52.39%를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정치적 규범과 이념적 내용을 강조한다(高維 외 2020). 고등학교 「어문」 과목도 정치적 정체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전 교재보다 마오쩌둥 작품의 선편(選編)이 확대되었다(鄭新麗 2021).¹⁰⁾ 전체적으로 국내외 정세의 변화, 서구 사상의 침투, 역사적 허무주의의 유행 등이 중화민족공동체 구축의 이념적 지향과 모순된다는 판단 아래, 교과서 개편의 방침을 새롭게 확정했다(王飛 외 2023).

교과서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강화하였고,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혁신 이론으로 교과서 건설을 지도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교과서 건설을 ‘국가 업무’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국가가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집행, 연구를 모두 총괄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법에 따라 운용한다는 것이다. 1950년 인민교육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줄곧 교과서 편찬과 출판을 맡아왔지만, 18차 당 대회 이후 국가교재위원회, 교육부 교재국, 과정교재연구소 등이 잇달아 설립되면서 교과서 편찬, 심의, 발행체계를 갖추었다. 전국통일 교과서를 편찬하는 동시에, 지역과 민족, 도농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즉 민족교과서는 통일교과서의 기초 위에서 민족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선전하며 민족지역 학생의 귀속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국가발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역사와 정치 우선의 ‘통일교과서’와 소수민족의 문화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민족교과서’ 간의 위계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0) 마오쩌둥이 혁명 시기인 1925년에 쓴 「심원춘(沁園春·長沙)」은 반드시 첫 단원에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본문으로, 신중국 건국자들의 애국심을 부각해, 학생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재 중에 소개되는 이러한 정치 텍스트는 중국공산당의 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국에 대한 자신감과 중화진흥의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IV. 민족 지역별 상황과 쟁점

1.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교과서 개정과 간판 정비

20세기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중국 조선족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교육’이었다. 1949년 소수민족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학이 설립되었고,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교육진흥정책에 의해 민족교육이 활성화되었다. 2004년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조례」를 통해 조선어 중심의 언어교육에서 한어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으로 바뀌었고, 2010년부터 동북 3성의 조선족 민족학교 전체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소수민족 대입 가산점 정책 변화와 맞물려 실제 교육에서 한어와 민족어 두 언어 간 균형이 깨지면서 소수민족 언어교육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김경임 2022).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조선족의 대도시로의 이동, 저출산으로 인한 조선족 인구의 급감, 교육 경쟁력 약화에 의한 민족교육의 위기, 그리고 중국 주류 사회로의 빠른 적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 등이 있다(임형재 2013).

시진핑 집권 시기 들어서는 ‘민족단결진보교육정책’에 따라 2035년까지 전국적으로 한어(보통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수민족교육에도 중국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어 표준 교재인 「어문(국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선족의 민족문화가 포함된 내용이나 조선어를 함께 적은 형태로 연변교육출판사가 제작한 「한어(중국어)」 교과서를 사용해왔지만, 교과서 관련 정책을 모두 국가가 일임한다는 방침에 따라 바뀐 것이다. 교과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어’는 ‘조선족의 언어’와는 구분되는 ‘한족의 언어’라는 의미가 내포된 명칭이지만, ‘어문(국어)’은 ‘국가의 언어’라는 의미로, 민족 간의 구분 없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 조선어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표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견된다(이은홍 외 2022). 우선 2021~2022년에 출판된 초·중·고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입니다”로 시작되는 새로운 속표지가 삽입되었다. 이 서문에는 “중화민족 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가통용문자”인 중국어를 우선으로 학습하고, 조선어문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구판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한반도에서 이주해 정착한 역사, 역사 과정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선족이 겪었던 수난 등을 강조했다면, 신판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족이 아닌 중국 인민의 역사로서의 항일전쟁 표상이 강조되고, 이주 역사보다는 중화민족으로 귀속된 역사, 집단보다는 조선족 가정과 개인으로서 경제적 수난과 극복기가 수록되어 있다. 구판에서 언어는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고 문화 풍습 역시 조선민족의 것으로 되어있지만, 신판에서는 민족언어임을 드러내지 않고 문화 역시 중화민족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구판에서는 한국과의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공유할 수 있는 민족 문화나 도덕 가치의 공통점을 만들고, 북한과는 사회주의 이념, 고국이나 고향의 이미지를 공유하며 남북한과의 공통적인 면모를 드러냈지만, 신판에서는 남북한과 공유하는 지점이 축소되고 조선민족의 특수성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가치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요컨대 신판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구판에서 강조해왔던 조선족의 에스닉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지면서, 중국의 네이션 정체성으로 귀속되고 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에는 도시 간판 표기를 규범화한다는 이유로 조선어문자와 한자의 배열을 재정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22일 발표

한 연변 자치주의 「조선언어문자공작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통지」 제 1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나 상점 간판은 조선어문자와 한자 두 개 문자로 병기하되, 가로로 배열할 때는 한자를 앞(위)에, 조선어문자를 뒤(아래)에 배치하고, 수직으로 배열할 때는 조선어문자를 왼쪽, 한자를 오른쪽에 배치한다고 규정하였다(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 2022/07/22). 이는 기존 조선어문자 중심의 간판 양식을 한자 중심으로 바꾸는 규정으로, 현재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자영업자들의 간판까지 모두 교체하고 있다. 이는 언어문자통일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고, 국가 표준어와 민족어 간의 위계적 위상을 규범화한 조치라 하겠다.

2. 홍콩 통식교육과목의 개정 및 변화

홍콩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통식’(通識, liberal study)이라는 시사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1992년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된 자유토론 수업이다. 이 과목은 2009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었고, 홍콩 교사들은 대부분 이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등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에 10대, 20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배경에는 홍콩의 ‘통식’ 과목이 있다고 보았다(주간동아 2021/06/02; 한겨레 2020/11/27).

중국 당국은 통식교육과목의 전문성과 내용의 계획성, 가치관 교육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서구 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키고 홍콩인의 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며 학생들이 극단적인 정치운동에 참여하도록 동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蔡群青 외 2020). 예컨대 교과서

단원 설계에서 ‘오늘날의 홍콩’과 ‘현대 중국’을 함께 배치하여 홍콩인과 국민의 정체성을 이원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홍콩의 ‘법제와 사회정치참여’ 의제의 독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정치 및 법률과의 관계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부족하고 홍콩의 현대화 내용에 더 중점을 두으로써, 홍콩의 발전이 중국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콩 교육당국은 각 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4월 1일 고등학교 4개 핵심과목(중국어문, 영어어문, 수학, 통식교육과목)에 대한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통식교육과목의 이름을 이 과목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민사회발전과목”으로 바꾸었다. 둘째,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통식교육과목의 시수를 25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기존의 6개로 구성된 학습 단원을 3개 주제(‘일국양제’ 하의 홍콩, 개혁개방 이후의 국가, 상호의존의 세계)로 통합하였고, 중국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홍콩이 국가의 일부이며, 홍콩의 높은 자치권은 ‘일국양제’ 규정 하에서의 권한으로 제한했다. 셋째, 가치관 교육을 중시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화문화와 현대생활”이라는 주제를 증설하고 중국 본토 현장학습도 도입했다(王飞 2022, 95-97).

요컨대 개편된 홍콩 교과서 내용의 핵심은 홍콩 주민의 국가 정체성 수립과 애국애항(愛國愛港) 교육에 있다. 홍콩 행정장관의 지원 아래 홍콩교육노동자연합회는 애국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맞춤형 국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민교육개혁의 방향은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 학습을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유전자를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중국 국정(國情)과 「헌법」과 「기본법」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과목을 강화하며, 또한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소양과 직업윤리, 애국정서를 지속해서 향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장에서 ‘홍콩의 중국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3.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문화 개조

중국공산당에게 신장 위구르 지역은 경제안보전략 측면에서도,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집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¹¹⁾ 특히 독자적 언어와 문자뿐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으므로, 당국으로서는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국가 공용언어와 문자를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장 위구르 지역 학생 대부분은 국가 공용어와 문자를 처음 배우는 시기가 다른 지역보다 늦고, 특히 신장 남부에 있는 허토펜(和田)과 카슈가르(喀什) 지역, 키질수키르키즈 자치주 등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야 한어(표준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郑燕 외 2022). 이에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공용언어·문자를 보급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작 학년에서 국가 공용언어·문자 과정은 교육부가 편찬한 「어문」 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吴明海 외 2020).

신장 위구르 지역이 집단수용과 인권 논란을 낳으며 국제적 쟁점이 된 것은 바로 소수민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표준어 교육과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재교육캠프(職業技能教育培訓中心)’ 때문이다(Chinafile 2019/02/07). 중국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적 테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신장 지역의 일부 구와 현에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훈련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한다. 교육훈련센터는 학교의 성격을 지니며, 주로 국가 공용언어와 문자, 법률

11) 시진핑은 제2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에서 “신장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전 당과 국가 전체의 큰 일”이라며, “반드시 전략적으로 전 국면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책략과 안정적 조치로 영구적 안정세를 만들며 장기적 통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新华社 2014/05/29).

지식, 직업 기능, 테러방지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고 설명한다. “집중훈련, 기숙학습, 실습훈련” 등의 무료 직업기능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도달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며 취업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新华社 2019/08/16).

재교육시설의 수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근거가 부족했지만, 2020년 9월 발표된 「신장 노동취업보장」 백서에 따르면 신장 전체 지역의 연평균 훈련근로자 수는 128.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백서에서는 시설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자격을 취득해 취업했다고 하며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新华社 2020/09/17). 교육훈련센터에 입소하는 사람을 테러나 극단주의 활동을 권유받은 사람,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사람, 테러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위험이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지만(新华社 2019/08/16),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크다. 게다가 위구르족의 인구가 1,200만 명 규모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성인 위구르족이 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C4ADS(선진국방연구센터)가 작성한 「Shifting Gear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왔던 “신장 원조(對口援疆)”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¹²⁾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장 원조 계획에 따라, 동부 해안지역의 산업을 신장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왔는데, 그 방법으로는 ①정부의 공업단지 건설 ②대형

12) 이 계획은 2010년 제1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에서 제기되며 시작되었다. 국가가 재해지역 재건모델로 신장을 지원하는 조치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약 80여 개의 현에서는 전국 19개의 성·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인재, 기술, 관리,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신장 지역을 지원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신장 지역 민족의 취업과 교육, 주택 문제의 해결을 돕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계획으로 신장의 3백여 만의 농촌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2,500여 만의 각 민족이 함께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국유기업과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 ③사영기업에 수도·전기로 감면 등의 우대정책을 제공하여 신장으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신장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구르 무슬림과 기타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면서 소수민족이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들이 ‘재교육캠프’ 안에 갇혀서 위구르어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돕거나, 한족 남성노동자와 위구르족 여성노동자를 매칭해 합동결혼식을 치르는 회사도 성업 중이라고 밝힌다. 보고서는 한족 관리자들에 의한 이러한 문화적 통제에 일종의 ‘문화적 멸종(culture genocide)’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Nicole Morgret 2022).

물론 중국 정부는 신장원조 계획으로 인한 지역 발전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신장 지역이 전국적인 지원을 받아 2020년 말까지 3백여만 명의 농촌 빈곤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고, 2019년부터 중앙기업에서 신장 지역에 2,65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베이징의 지원을 받아 남쪽에 있는 쿤위시(昆玉市)에 현대적인 인민병원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현재 신장 지역의 면 방직업이 크게 발달하여 전국 생산능력의 17.6%를 차지하고 60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이다(新华社 2021/07/20). 그러나 발전을 통해 빈곤을 제거하려는 국가의 계획은 종교 민족인 위구르족의 문화와 전통도 동시에 지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문제는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문화윤강(文化潤疆)’ 프로젝트이다. ‘문화윤강’이란 중화문화를 이용하여 신장의 각 민족 간부·군중의 정신세계를 윤택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 중국특색사회주의문화로 신장의 각 민족 간부·대중의 영혼을

보양하고 윤택하게 하여 모두가 시종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스스로 중국의 얼굴도 있고 중국의 맛도 있으며 중국의 마음도 있고 중국의 영혼도 있는 중국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中国民族报 2020/10/14).

문화운강 프로젝트는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 주입과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한다.¹³⁾ 시진핑은 신장지역 시찰에서 “정체성 증진을 목표로 문화운강을 깊이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는 국가와 민족의 중요한 영혼이다. 중화문화를 운용하여 신장의 모든 민족을 교육하고 영향을 미치며 감화시키려면, 문화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떠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용언어·문자로 중화문화를 전파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해야 하며, 문화운강 프로젝트로 신장 각 민족의 마음속에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杨舍飞 외 2022). 신장에 국가 공용어를 보급해야 중화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이데올로기 영역의 문화 진지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V. ‘중화민족’ 통합에 내재된 국가의 폭력성과 소수민족의 서발턴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의 전면 영도’를 강조하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과 사상, 선전사업을 각 민족자치구가 아닌 ‘국가’ 주도로 통합하고 체계화해왔다. 어문과 역사, 사상 관련한 교과서가 국

13) 2020년 개정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조례」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종교이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新华社 2021/12/04).

가가 편찬한 교재로 통일되고, 해당 민족어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은 표준어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새로운 꿈에 맞춰, 기존의 민족관과 국가관, 역사관, 교육관, 종교관까지도 바꾸려는 ‘전환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은 당이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행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민족 국가를 ‘대가정’에 비유함으로써 가족 내 역할, 책임, 등급을 암묵적으로 설정했고, ‘중화민족 대가정’이라는 가정의 은유는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가정이라는 혈연의 신화를 제공하면서 민족국가에 합법성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Wang & Chen 2023).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고, 통일적인 문자언어정책을 통해 민족단결과 국민통합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2021년 3월 시진핑은 전인대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석하여 “문화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공감이며, 민족단결의 뿌리이자 민족화합의 혼이다. 국가 공용어와 문자를 제대로 보급하고 국가통합 교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人民日報 2021/03/06). 그러나 이러한 국가정책의 규칙 변경은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꾸려는 기획으로, 새로운 민족교육사업의 요체는 말과 글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문화와 이데올로기, 민족 정체성까지 국가 목표와 논리에 따라 개조하려는 ‘문화 동화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는 기존에 중국공산당이 유지해왔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게다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주조’ 등의 정책에는 한족 중화문화의 우월성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러한 ‘문화’적 우월감은 ‘중화민족 부흥’ 구호와 함께 강조되는 홍색유전자 논리의 혈통적 우월감과 결합하면서, ‘인종’에 대한 우월감이나 ‘문화

적 인종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체 민족의 언어와 문자,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소수민족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국가 중심의 민족정책 변화의 흐름에 대해 개별 소수민족의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조선족 사회의 경우 민족어 교육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의 정서는 있지만,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대응하는 목소리는 없다. 조선족에게 민족어 교육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근간이었지만, 다른 소수민족보다 빠르게 시장과 경제 논리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특히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는 조선족들에게 다양한 이주 기반을 제공했고, 민족교육의 약화는 이미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왔다. 한국 기업은 주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연해 도시에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많은 조선족이 연해 도시로 이주했다. 특히 흑룡강성의 경우 조선족들의 집거 지역인 길림성이나 요녕성에 비해 변방 지역인 데다 경제가 낙후되어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심했고, 또한 흑룡강성 조선족은 한국과 연고가 많은 지역이라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가 많았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전문능력을 지닌 조선족 교사들은 기업이나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했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중국에서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족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증가하였다. 한족 학교에 다니면 중국인과 인맥을 넓힐 수 있고 중국 어디에 가든 자신감 있을 거로 생각하여 자녀들을 한족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

물론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는 불만도 있고, 특히 엘리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족과 소수민족은 '공생'의 관계이지, '동화'되거나

14)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학생이 한 명 밖에 없어요: 흑룡강성 조선족 교육의 현주소.”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krcn&contentsId=GC05305327>(검색일: 2023. 04. 11).

불합리한 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족 단결이나 민족 융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융합’은 민족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지 특정 민족이 형해화될 정도로 융합되는 것은 민족의 파괴이며 소수민족에 대한 멸시라는 것이다(임춘광 2017). 그렇지만 시장과 경제논리는 이미 조선족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많이 바꿔놓았고,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모범 소수민족’ 답게 주류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왔다. 또한,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모국이 존재하고, 시장화와 세계화라는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했다.

반면 자체 언어와 문자뿐 아니라 종교와 결합한 문화적 양식을 가진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민족교육정책에 대해 저항해왔다. 과거 제국시대엔 안전과 존엄 받는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한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로 많은 이족(夷族)들이 한화(漢化)로 정체성을 바꿨다(왕명가 2008, 39). 그러나 지금은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화된 틀에서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재구성되고 있다. ‘중화민족’이라는 주입된 상상은 오히려 자기 민족이 한족의 가치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종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더 유발하게 된다. 특히 자체 종교가 있는 신장 위구르족의 경우, 주입되는 사상교육을 오히려 자신의 종교를 부정하는 또 다른 종교적 교리로 인식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당영도와 시진핑 사상,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민족인 ‘중화민족’을 만들려 한다. 이러한 통치이념의 일방적 주입은 종교가 있는 소수민족에게는 또 다른 종교의 주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슬람의 교리가 아니라 시진핑 사상의 교리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국가에서 대중교육은 국가 중심의 역사서술과 관련되는

데, 이러한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서술은 개별 종족이 겪어왔던 경험 속에서 공유된 기억과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한화 과정에서는 국가의 역사서술이나 대중교육의 과정이 없었고, 개별 소수민족은 장기적 삶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중심의 역사관과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소수민족이 공유한 경험 및 기억과 충돌하며, 국가의 폭력적인 대응 방식으로 이들을 탄압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민족 동질화 정책은 민족 간의 구분 없이 통일된 시장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과 국가의 네이션 정체성 역시 모순적인 것만은 아니며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민족 정체성의 내용을 전통문화나 특히 우수한 중화문화의 복원과 공동체 의식의 주조로 만들어가려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네이션 차원의 정체성은 일상경험 속에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보유했던 소수민족의 문화정체성과 갈등을 빚고 모순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수인민족을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틀에서 동질화하게 되면, 소수민족의 문화는 소수민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전체 중화민족의 문화가 되고, 이로써 소수민족의 문화는 더 이상 자신의 것만이 아닌, 중화문화 속에 ‘포획’된 문화가 된다. 또한, 지배권력에 의해 기획·수행되는 중화민족이라는 ‘정치 주체화’의 과정에 포획되면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소수민족들은 점차 말할 기회를 잃고 침묵 당하며 서발턴화가 진행된다.

‘중화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내용이 정치적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모호한 문화적 내용으로 채워지고 재구성되려 할 때, 소수민족의 에스닉 정체성과 중화민족이라는 네이션 정체성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이 아니라, 문화정체성이 뚜렷

한 소수민족에게는 더욱 커다란 민족 탄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지역을 안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민족단결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갈등 없음을 지향하는 ‘획일적 통합정책’ 이면에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투 고 일: 2023년 06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3년 08월 09일

계 재 확 정 일: 2023년 08월 09일

참고문헌

- 김정임. 2022. “시진핑 시기 중국 소수민족 언어교육정책 연구.” 서울시립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대런 바일러, 홍명교 역. 2022.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서울: 생각의힘.
- 로절린드 C. 모리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파르타 차테르지·리 투 비를라·두루실라 코넬. 태혜숙 역.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 서상민. 2001.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정책.” 『민족연구』 6.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학생이 한 명 밖에 없어요: 홍콩강성 조선족 교육의 현주소.”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krcn&contentsId=GC05305327>(검색일: 2023. 04. 11).
- 오병수.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 『歷史: 中外歷史綱要』 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56.
- 왕명가. 이경룡 역. 2008. 『중국 화하변경과 중화민족』.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동률. 2004.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국가전략』 10권 3호.
- 이은홍, 한담. 2022.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6.
- 이장훈. 2021. “中 공산당 ‘홍콩 市民 중국인 만들기’ 돌입.” 『주간동아』 (6월 2일).
- 이재호. 2008. “티베트의 민족문제(1):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분리독립운동.” 『민족연구』 35.
- 임춘광. 2017. “중국 소수민족 정책상의 소수민족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인권법평론』 18.
- 임형재. 2014. “중국의 이중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의 중국어 교수

- 도입.” 『중국어언문화연구』 9.
- 정인환. 2021. “중국, ‘홍콩 민주 진영 잇단 구속’ 치밀한 계획 세운 듯.” 『한겨레』 (3월 1일).
- 정보은. 2021. “중국 동북진흥전략과 소수민족정책 변화의 함의.” 『중국연구』 86.
- 정인환. 2020.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인문학 교육’ 탕으로…중국 본토 현장학습도 도입.” 『한겨레』 (11월 27일).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高玉峰(가오위핑). 2011. “加强社会管理提高民族地区群众工作水平.” 『思想政治工作研究』 8.
- 高维(가오웨이), 颜蒙蒙(옌명명). 2020. “统编教材与国家认同: 统编初中道德与法治教材中的国家认同教育内容研究.” 『教育学报』 3.
- 国务院办公厅(국무원판공청). 2017.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固边兴边富民行动“十三五”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7-06/06/content_5200277.htm (검색일: 2023. 04. 30).
- 杜建录(두젠루). 2022. “增强历史自觉, 坚持正确的中华民族历史观.” 『中国民族报』 (8월 30일).
- 刘昌升(류창성). 2015. “中美民族团结教育课程设计述评.” 『现代基础教育研究』 18.
- 林平(린핑). 2021. “地方立法规定民族学校用民族语言教学, 全国人大: 不合宪.” 『澎湃新闻』 (1월 20일).
- 习近平(시진핑). 2012. “习近平: 继续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 『新华社』 (11월 29일).
- 习近平(시진핑). 2019.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求是』 7.
- 习近平(시진핑). 2021. “习近平出席中央民族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新华社』(8월 28일).

习近平(시진핑). 2022.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 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22年10月16日).” 『人民日报』(10월 26일).

杨令飞(양링페이)·夏文熠(샤윈이)·许科龙波(쉬커룽포). 2022. “新疆推进国家通用语言文字普及维护国家安全的重大意义与实践路径.” 『喀什大学学报』43(1).

梁玉春(양위춘). 2020. “深入开展文化润疆工程.” 『中国民族报』(10월 14일).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2022. “延边州人民政府办公室关于印发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实施细则的通知.”

http://zfxgk.yanbian.gov.cn/cyqzf/xxgkml/202207/t20220725_386239.html (검색일: 2023. 4. 11).

严庆(엔칭). 2022. “持续发力, 不断深化: 党的十八大以来的学校民族团结进步教育.” 『中国民族教育』7,8.

王珣(왕쑤). 2014. “在第二次中央新疆工作座谈会上发表重要讲话.” 『新华社』(5월 30일).

王飞(왕페이). 2022. “香港通识教育科的最新发展与未来展望: 基于香港青年学生国家认同的视角.” 『统一战线学研究』5.

王飞(왕페이)·刘身强(류젠창). 2023. “中华民族共同体视角下教材建设的价值意蕴与推进理路.” 『统一战线学研究』1.

吴楠(우난). 2021. “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 『人民日报』(3월 6일).

吴明海(우밍하이)·娄利杰(리우리제). 2020. “新疆国家通用语言文字教育政策的发展历程, 经验与意义.” 『民族教育研究』5.

于子青(위쯔칭). 2021. “以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为主线, 推动新时代党的民族工作高质量发展.” 『人民日报』(8월 29일).

- 张军(장진). 2021. “西藏自治区国家通用语言文字教育的实践与经验.” 『民族语文』 6.
- 周学斌(저우쉐빈). 2016. “孙中山与振兴中华的‘中国梦’” 『团结报』 (7월 21일).
- 郑新丽(정신리). 2021. “统编高中语文教材中的国家认同教育内容研究.” 『内蒙古师范大学学报』 4.
- 郑燕(정연)·王瑞雪(왕루이췌). 2022. “基于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国家通用语言文字推广与普及.” 『中国民族教育』 10.
- 中共中央(중공중앙). 2020.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工作条例.” 『人民日报』 (10월 13일).
- 中共中央·国务院(중공중앙·국무원). 2019. “中共中央·国务院印发《新时代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 『新华社』 (11월 12일).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08. “教育部办公厅, 国家民委办公厅关于印发《学校民族团结教育指导纲要(试行)》的通知.” http://www.moe.gov.cn/jyb_xxgk/gk_gbgg/moe_0/moe_2642/moe_2643/tnull_44510.html (검색일: 2023. 04. 30).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16. “教育部国家语委关于印发《国家语言文字事业“十三五”发展规划》的通知.”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7/content_5194901.htm (검색일: 2023. 02. 12).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18. “教育部, 国务院扶贫办关于印发《深度贫困地区教育脱贫攻坚实施方案(2018~2020年)》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03/moe_1892/moe_630/201802/t20180226_327800.html (검색일: 2023. 02. 12).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2021. “教育部等四部门关于印发《深化新时代学校民族团结进步教育指导纲要》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09/s3081/202205/t20220517_628242.html (검색일: 2023. 04. 30).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신문판공실).
2019. “新疆的职业技能教育培训工作.” 『新华社』 (8월 16일).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신문판공실).
2020. “《新疆的劳动就业保障》白皮书.” 『新华社』 (9월 17일).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2018. “中共中央印发《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新华社』 (3월 21일).
- 纪晓华(지샤오화). 2022. “中国观察: 潘岳的民族融合观.” 『星島日報』 (6월 22일).
- 蔡群青(차이친칭)·夏海鷹(샤하이잉). 2020. “立德树人落实机制下的香港国民教育发展策略.” 『中国教育科学』 3.
- 成嵐(정란). 2021. “习近平在全国宗教工作会议上强调, 坚持我国宗教中国化方向, 积极引导宗教与社会主义社会相适应, 李克强主持栗战书王沪宁赵乐际韩正出席汪洋讲话.” 『新华社』 (12월 4일).
- 程春华(칭춘화). 2021. “坚持正确的中华民族历史观.” 『人民日报』 (11월 30일).
- 费孝通(페이샤오통). 1999. 『中华民族多元一体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 郝亚明(하오야밍). 2022. “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若干话语趋向.” 『民族研究』 4.
- 何军(허진). 2021. “同心逐梦绘“疆”来: 新一轮对口援疆“国家行动”综述.” 『新华社』 (7월 20일).
- 胡鞍钢(후안강)·胡联合(후렌허). 2011. “第二代民族政策: 促进民族交融一体和繁荣一体.” 『新华文摘』 24.
- Amnesty International. 2021. “China: Draconian repression of Muslims in Xinjiang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June 10.
- BBC News. 2021. “Their goal is to destroy everyone: Uighur camp detainees allege systematic rape.” February 02. (김색일: 2021. 04. 30).
- Clyde Yicheng Wang and Zifeng Chen. 2023. “From ‘motherland’ to

‘daddy state’: A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gender undertone in China's nationalist discourses.” *Nations and Nationalism*. January 12.

James A. Millward. 2019. “‘Reeducating’ Xinjiang’s Muslims”, *Chinafile*. February 7.

Nicole Morgret. 2022. “Shifting Gears: The Rise of Industrial Transfer into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June 30. <https://c4ads.org/reports/shifting-gears/>(검색일: 2023. 05. 01).

Abstract

National-State Integration and Subalternized Minorities in the Xi Jinping Era

JANG, Youn Mi
Dongseo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ational view and historical perspective centered on the “Chinese nation(中華民族),” along with the features of national common language character policies aimed at fostering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the situation and issues of national education policie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is state-led integration policy were examined focusing on Xinjiang, Yanbian, and Hong Kong. Since the expression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was included in the Communist Party and National Constitution, it has been reorganized into the goal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always dreamed of for the past 100 years and has become an ideology that the entire country should pursue. In order to realize this dream of national revival, the creation of a “Chinese nat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succession to the “Chinese children(中華兒女)” generation, and education on the “correct view of history of the Chinese nation” are being emphasized. As the concept of the Chinese nation gains

prominence for national unity, minority groups that have maintained their cultural identity through ethnic language education are gradually marginalized. In other words, within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subjectivization” of the Chinese nation, which is planned and executed by the ruling power, the opportunity to voice their perspectives is gradually diminishing, resulting in suppression and subordination.

Keywords: Chinese Nation, Subalternized Minorities,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nation, culture enriches the frontier, Xinjiang Uighur, Hong Kong liberal study, Korean-Chinese